인문논총 제74권 제2호 (2017.5.31), pp. 115~137
[DOI] https://doi.org/10.17326/jhsnu.74.2.201705.113

실패로 끝난 '역사수정주의'의 야심찬 도전

[서평] Brandon Palmer (2013), *Fighting for the Enemy: Koreans in Japan's War, 1937-1945*,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272쪽.

이 승 엽*

1. 머리말

이 책은 저자의 하와이대학 박사학위 청구논문『일본의 조선인 전시동원: 1937-1945』(2005년)[1]를 바탕으로 2013년에 출간된 저작이다. 그리고 원서의 출판 1년 후, 학술서로서는 이례적으로 빠른 일본어 번역본이 간행되어,[2] 전문연구자가 아닌 사람들도 용이하게 본서에 접하게 됨으로써, 영어권에 이어 일본어권에서도 영향력을 넓혀 가게 되었다.

본서는 전시하 조선의 동원정책을 구명하고, 지금까지의 한국의 저항내셔널리즘과 '일제' 비판의 관점에서 기술되어 온 역사에 의문을 제시하면서, 새로운 역사상을 구성한다고 하는 야심적인 기획으로 구성되어,

* 붓쿄대학(佛教大學) 역사학부 준교수

1) Palmer (2005), "Japan's Mobilization of Koreans for War, 1937-1945", Ph.D.diss., University of Hawaii at Manoa.

2) ブランドン・パーマー, 塩谷紘 訳(2014),『検証 日本統治下朝鮮の戦時動員 1937-1945』, 草思社.

www.kci.go.kr

한국과 미국 학술잡지에 전문연구자에 의한 서평이 발표되는 등, 그 나름의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일본에서는 연구자 사회 내에서는 거의 언급되지 않는 반면, 강한 정치성을 지닌 민간재단으로부터 '학술상'을 수상하는 등, 본서를 둘러싼 명확한 온도차를 느낄 수 있다.

그런데 본서(원저 및 일본어역)를 읽으며, 나는 그 기술 내용에 대해 상당한 위화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만약 그것이 자신의 역사적 사실관계에 대한 무지, 또는 고루한 역사관에 의한 것이었다고 한다면, 본서를 통해 크게 계몽, 훈도될 기회가 되었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의문을 느끼는 서술에서 저자가 인용한 원자료를 찾아 확인할 때마다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다. 분석이나 논리 전개 이전에, 역사학연구의 기본이 되는 사료의 독해와 이용에 큰 문제점을 안고 있었기 때문이며, 어떤 부분에서는 학문연구로서 지켜야 할 연구윤리를 위반하고 있다는 의념까지 들었기 때문이다.

이 서평은 이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서평이 해당 저작의 내용소개, 그 연구상의 의의 및 논지에 대한 비평으로 구성되는 것과는 다른 형식을 취하고 있다. 가장 기초적인 사료비판・독해・인용 등에 관한 검증과 비판에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으며, 본서를 둘러싼 학술적・사회적 평가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음을 밝혀 둔다. 또한 이 서평은 이미 발표된 일본어 서평을 한국어로 번역하면서 다소의 수정과 가필을 가한 것임을 밝혀 둔다.[3)]

3) 李昇燁(2017), 「(書評)ブランドン・パーマー(塩谷紘訳)『検証日本統治下朝鮮の戦時動員』(草思社、2014年)」『歴史学部論集』 7, 佛教大学歴史学部. 원문은 붓쿄대학 논문목록 디포지토리에서 열람할 수 있다. URL은 다음과 같다. http://archives.bukkyo-u.ac.jp/rp-contents/RO/0007/RO00070L097.pdf.

www.kci.go.kr

2. 주요 내용과 논점

본서는 식민지 조선에서의 전시동원의 특징에 관해, "일본정부는 전시하 정책의 입안과정에서 조선인의 민족적 저항을 최소화하고, 조선 민중의 권리 요구를 봉쇄하는 데 주의를 기울였다"고 하는 한편, "조선인은 협력이나 거부를 선택할 수 있었다"(p. 4)고 하여, 기존의 '민족주의사관'에 의한 연구나, 일본에서의 전쟁책임론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연구를 비판함과 함께, 현대 한국사회에 널리 공유되고 있는 역사인식에 대해 비판을 가하고 있다. 주요한 논점은 다음과 같다.

(1) 조선에서의 전시동원의 패러독스, 곧 조선인사회의 저항과 전시동원이라는 과제 속에서 정치・사회적 평등을 불러오는 결과가 될 황민화정책(p. 185)이나, '법제 및 정책의 완급조절'(p. 183), 그밖의 교화・선전활동을 행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논하고 있다. 애초 조선총독부는 식민지에서 "단일하며 지배적인, 그리고 악마적인 조직"은 아니었으며(p. 11), 전시동원을 위해 조선인 측의 이해와 협력을 구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 전시 말기에 이르러서는 그나마 유지되어 오던 권력－민중의 관계가 붕괴됨으로써 격화되는 민중의 저항에 대해 권력 측도 야만적인 통치방법을 채택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등의 설명은 의미 있는 문제제기라 하겠다. 또한 영국・프랑스・미국 등에서의 식민지 주민의 군사・전시동원의 가혹한 실상과 비교함으로써, 조선인 동원정책의 특징을 그려 내려한 점은, 이전의 연구가 주목하지 않았던 측면이기도 하며, 보다 넓은 시야를 제공한 것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으리라 본다.

(2) 지원병・징병・노무동원에 대한 조선인 측의 다양한 대응에 주목하여,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당한 것이 아니라, 적극협력・소극협력・도망・저항 등,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었다고 보며, 특히 전후 한국에서 공간된 회고록이나 근년의 구술자료를 다수 활용하여 논증을 시도했다. 또한 강제동원의 피해자 측의 입장만이 아니라, 동원하는 측의 시점

www.kci.go.kr

에서 조선인의 군사・노무동원이 갖는 의의(제국의 전쟁수행에서의 역할)를 음미하여, 지배자 측의 의도와 동인을 탐구함으로써, 총체적이며 입체적인 이해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3) 전시체제에서의 조선의 역할에 관해서도 제국 전체의 입장에서 볼 것을 주장하고 있다. 곧 제국 육해군 전체의 인원에서 볼 때, 조선인 지원병・징병이 가지는 군사적 의미는 미미한 것이었으며, 오히려 군속・노무동원이 큰 의미를 가진다는 점을 논하고 있다. 또한 조선인은 일본 제국주의의 희생자임과 동시에, 일본의 침략전쟁행위의 공동가해자이기도 하다고 보아, "한국인은 보다 글로벌한 관점을 배양하여, 자신들의 경험과 [태평양전쟁기에 침략당한] 다른 식민지들의 경험 사이의 관련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p. 189)고 역사인식의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

전시체제하 조선인 측의 사상・행동의 다양성에 착목하고, 이 같은 조선민족의 움직임이 총독부의 전시체제의 구축・유지・추진에 미친 영향이나, 그에 대한 총독부측의 대응을 봄으로써, 지배－저항의 이항대립의 구조가 아닌, 상호관계 속에서 정치사적 접근을 시도한 점은 의미 있는 문제제기이다. 또한 개인의 다양한 대응 양상을 논하기 위해, 독립기념관이나 강제동원위원회의 구술자료 다수를 적극 활용한 점도 주목된다.

그러나 이같이 의미 있는 문제설정에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제기한 과제를 충분히, 그리고 적절히 규명했는가 하는 점에 있어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지 않을 수 없다. 이하 이에 대해 검증해 나가겠지만, 사료의 독해와 이용에서의 문제점, 그리고 무지와 상상에 근거한 논리전개로 인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기는커녕, 오히려 틀린 내용을 기술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선행연구에 대한 의미 있는 비판이나, 새로운 역사상의 제시에는 이르지 못하고, 나아가 '학술서'라 하기 조차 어려운 참담한 책이 되어 버리고 말았다.

www.kci.go.kr

3. 사료이용상의 문제점

가장 먼저 지적해야만 할 것은, 본서는 역사연구의 기본이라고도 할 수 있는, 사료에 근거한 사실관계의 확인과 논증이라는 점에서 수많은 오류를 노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바꾸어 말하면, 과학적 연구로서 성립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 그 자체가 극히 취약하다고 하겠다. 본서에서의 사료이용 상의 문제점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① 사료의 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사례

저자는 조선인의 의무(병역) 수행에 대한 권리(참정권) 부여의 문제에 관해, "재미있게도 조선군은 이 문제에 관해 진보적인 입장을 취하여, 지원병제도는 조선인의 참정권 획득을 위한 질주라고 생각하고 있었다"(p. 50)고 서술하고 있다. 그러나 저자가 전거로 제시하고 있는 원문 사료인, 조선군사령관 고이소 구니아키의 「조선인 지원병제도에 관한 의견」[4]에는 "폐해가 심한 것으로는 선인(鮮人) 평등권 획득열에 영합하기라도 하는 듯한 천박한 대중영합주의 따위는 단연코 채택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여, 조선인의 병역과 참정권문제를 연관시키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

또한 저자는 「조선출신병 취급 교육의 참고자료 송부에 관한 건 육군일반에 통첩」[5]이라는 사료를 근거로, 징병된 조선인의 군대 적응을 돕기 위해 "조선인 고참병을 새로 입대한 신병의 상담자로 이용한다"(pp.

4) 朝鮮軍司令官 小磯國昭, 「朝鮮人志願兵制度ニ關スル意見」(JACAR, ref. C01004599600). 팔머의 원저에서는, 민족문제연구소, 『일제하 전시기 정책사료총서』, 민족문제연구소, 2000년에 수록된 사료가 인용되고 있으나, 이 서평에서는 독자가 보다 손쉽게 원문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아시아역사자료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는 사료를 언급할 때는 '(JACAR, 레퍼런스코드)'와 같이 해당사료의 서지사항을 기재하기로 한다.

5) 「朝鮮出身兵取扱教育ノ參考資料送付ニ關スル件陸軍一般ヘ通牒」(JACAR, ref. C01007819700).

www.kci.go.kr

133-134)고 서술하고 있으나, 이는 사료의 내용과는 정반대이다. 사료에는 “가급적 조선의 실정에 정통한 내지병(內地兵)을 붙여”라고 기술되어 있으므로, 조선에서 생활한 경험이 있는 일본인 병사를 조선인 신병 지도의 임무에 활용하도록 지시한 것이라 보아야 할 것이다.

② 사료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인해 잘못된 논거를 제시한 사례

지원병제도 도입을 위한 선무공작으로서, 일본과 조선이 “동조동근이었음을 강조하기 시작했다”(p. 54)고 서술하고 있으나, 애초 동조동근론이 중일전쟁 시기에 외쳐지기 시작한 언설도 아니며, 이 기술이 전거로 하고 있는 사료는 1942년 7월에 간행된 잡지『조선행정(朝鮮行政)』이므로 시기적으로도 합치하지 않는다.

“조선인 지원병제도에 반대하는 일본인 전체에 대하여” 일본정부는 내선일체의 논리로 설득했다는 기술도 있는데(p. 55), 그 근거로서는 일본 외무성 외교사료관 소장의「조선인 황민화 기본방책」[6](본서의 주에는 ‘일자불상’으로 되어 있으나, 편철된 문서의 일자로 미루어 보아, 1944년 1월 이후에 생산된 문서로 추정된다)을 들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내각참사관 무라야마 미찌오(村山道雄)와 재일조선인 통제단체인 협화회(協和會) 사이에서 재일조선인의 황민화문제에 관해 논의한 것이며, 이미 징병제도가 실시되고 있는 시점이기에 지원병문제에 관한 기술의 근거로서는 부적절한 것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육군성 징모과「본년도 채용할 조선인 지원병의 채용인원 및 입영 또는 소집 부대에 관한 건」[7]이라는 문서를 통해 제1기 육군특별지원병이 배속된 부대와 병종(兵種) 및 인원수에 관해 설명하고 있으나(p. 89), 이 문서는 배속된 결과를 적시한 것이 아니라, 지원병제도 실시 직전인

6)「朝鮮人皇民化基本方策」(JACAR, ref. B02031285300).

7) 陸軍省徵募課「本年度採用スヘキ朝鮮人志願兵ノ採用人員并ニ入營又ハ召集部隊ニ關スル件」(JACAR, ref. C01004411700).

www.kci.go.kr

1938년 1월 시점에서 향후의 실시계획으로 작성된 것이다. 즉 '과거형'이 아니라 '미래형'의 내용을 담고 있는 문서인 것이다.

③ 발화의 주체를 잘못 이해한 사례

사료를 인용・이용할 때, 집필한 주체를 자의적으로 규정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예를 들면, 아사히신문 경성지국 기자 무라 쯔네오(村常夫)의 「싸우는 조선의 전망(戰ふ朝鮮の展望)」을 인용하면서 필자를 "식민정책 당국의 어떤 관리"라 한다거나(p. 22), 소설가 장혁주(張赫宙)의 문장을 "일본의 지도자들"의 생각을 추측하는 사료로서 제시한다거나(p. 47), 민간의 이데올로그로서 집필 당시 조선총독부 사정국 노무과의 촉탁으로 근무했던 우에다 다쯔오(上田龍男, 조선명 이영근[李泳根])의 진술을 "총독부"의 것으로 간주한다거나(p. 57), 총독부와는 일선을 긋는, 오히려 총독부의 급진적인 동화정책과 대립하기까지 했던 조선동아연맹의 기관지 『동양지광(東洋之光)』에 대해 "정부가 간행하는 어느 일본어 잡지"라고 해설하거나(p. 100), 관변단체인 조선방공협회(朝鮮防共協會)의 사업에 대해 "총독부"의 활동으로서 다루는(p. 161) 등의 잘못이 산견된다.

이 같은 기술태도는 일견 사료에 근거하고 있는 듯이 보이기는 하지만, 실은 사료에 담긴 사실과는 동떨어진 내용을 사실인 듯 기술하고 있는 것으로, 저자의 사료독해 능력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요인이 된다.

④ 본문 내용과는 관계 없는 사료를 전거로서 제시한 사례

앞선 ①~③의 사례는, 어떤 의미에서는 연구자의 기량 부족으로 사료를 적확히 읽어 내지 못한 때문에 저지른 실수라고 이해할 여지도 있지만, 이하에서 다룰 사례는 없는 것을 마치 있는 듯이 기재한 것으로, 저자가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허위의 사실을 기술한 결과가 되어 버린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한 문제라 할 수 있다.

www.kci.go.kr

본서에서는 「조선출신병 취급교육의 참고」[8]라는 사료를 수차례 전거로 들곤 하는데, 이 문서는 표제통첩문서에 기재되어 있듯이 1943년 8월 8일 「군사단참모장 등 회동에 즈음한 병무국장 구두연설 요지(軍師團參謀長會同ノ際ニ於ケル兵務局長口演要旨)」를 문장화한 것이다. 그런데 본서에서는 이것이 때로는 "일본의 식민지 통치자"가 조선인을 황민화함으로써 동원에 수반되는 저항의 최소화를 꾀한다는 전망을 피력한 사료적 근거가 되기도 하고(p. 21), 때로는 "총독부 관계자"가 중등학교 졸업 이상의 조선인이 특별지원병에 지원하지 않는 경향을 지적했다는 전거도 되며(p. 87), "군의 간부"가 조선인 병사에게 정신・습관상의 문제를 지적했다는 전거가 되기도 한다(p. 105). 문서의 기재내용과 합치하는 것은 마지막 하나뿐으로, 그 밖에는 작성주체도 기술내용도 전혀 동떨어진 설명이다. 그야말로 한 건의 문서가 시공을 초월하여, 전시기 식민지 조선의 모든 측면을 밝혀 주는 만능의 사료로서 대활약하고 있는 것이다.

그 밖의 사례를 살펴보자. 내선융화를 표방한 일본의 통치가, "1930년대에 들어서면서 조선인의 (조야하고 파벌적이며 수다스러운 등의) 문화적인 약점을 강조하게 되었다. 일본인 관료는 이것을 수세기에 이르는 사회적 정체의 결과라고 주장했다"(p. 20)는 기술이 있다. 이것은 사실관계와도 합치하지 않는 설명이지만, 전거로서 들고 있는 조선총독부 정보과 편『새로운 조선』[9]의 55쪽에는 전시하 조선노동자의 '노무보국'을 예찬하는 기술이 있을 따름이며, 또 하나의 참고문헌인 마에다 하지메(前田一)의『특수노무자의 노무관리』[10] 16쪽은, 조선인 노동자의 내지 이입 증가와 그것의 지도방침에 대한 내용으로서, 본문에서 기술하는 바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다.

또한 육군성의 「조선인 지원병 문제에 관한 건」[11]을 전거로 삼아 "조

8) 「朝鮮出身兵取扱教育ノ參考」(JACAR, ref. C01007778900).

9) 朝鮮總督府情報課 編(1944),『新しき朝鮮』, 朝鮮行政學會.

10) 前田一(1943),『特殊勞務者の勞務管理』, 山海堂.

www.kci.go.kr

선총독부는 소수의 뛰어난 청년을 지역에서 선발해서 훈련소로 보내어 제국의 문화를 가르침으로써 기층(조선) 문화를 순수(일본) 문화로 대체할 것을 기대하였다"(p. 46)라고 기술하고 있는데, 이 같은 내용이 재차 서술되곤 한다(p. 56). 그러나 이 문서의 내용은 1937년 12월의 각의결정 사항으로, 조선인의 황민화, 지원병 채용, 신사숭경을 꾀한다는 정책목표가 밝혀져 있을 뿐, '문화의 대체' 운운하는 내용은 일언반구 등장하지 않으며, 애초에 '총독부'가 작성한 문서도 아니다.

이 같은 기술도 있다. "1942년 시점에 전조선에는 35만에서 42만에 이르는 애국반이 존재했다"(p. 22). 이 기술의 전거로서, 미타라이 다쯔오(御手洗辰雄)의 『미나미 총독의 조선통치』,[12] 조선총독부 편찬의 『조선에 있어서 국민정신총동원』[13]이 제시되고 있는데 양쪽 다 문제가 있는 인용이다. 전자의 문헌에서는 시기와 숫자가 잘못 인용되어 있다. 또한 후자의 문헌은 애국반이나 그 상급조직인 국민총력조선연맹(1940-1945년)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 그 전신에 해당하는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1938-1940년)의 결성과정에 관한 것이다. 애당초 1940년에 출판된 서적에 1942년의 통계가 나와 있을 리가 만무하지 않은가.

그밖에 조선인 징병제도에 대해 일본 사회 일반이 반감을 느끼고 있었다는 부분(p. 98)에 제시된 전거는, 하나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징병제도가 아니라 조선인 참정권 부여에 대한 반감이 드러나 있는 사료이다. 또한 p. 216의 주(14)에는 미야 고이찌(宮孝一)의 『조선의 노무자』[14]에서 pp. 240-243, p. 248을 참조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해당 자료는 본문 50쪽에 불과한 소책자로서, 저자가 기재한 페이지는 존재하지조차 않는다.

이같이 황당무계한 전거 제시는 일차자료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국민

11) 「朝鮮人志願兵制度ニ關スル件」(JACAR, ref. C01004411500).

12) 御手洗辰雄(1942), 『南總督の朝鮮統治』, 京城日報社, p. 27.

13) 朝鮮總督府(1940), 『朝鮮に於ける國民精神總動員』, 朝鮮總督府, pp. 27-29.

14) 宮孝一(1945), 『朝鮮の勞務者』, 東都書籍.

www.kci.go.kr

총력조선연맹의 지방조직을 통한 총독부의 지방통제를 설명하면서(p. 22) 우찌다 쥰(内田じゅん)의 박사학위논문을 전거로 삼고 있으나, 우찌다 논문의 해당부분은 정동총대 및 방면위원 등, 지역명망가를 중심으로 한 주민의 자치조직을 통치에 활용했음을 설명하는 것으로, 총력연맹과는 하등의 관계도 없다.[15] 또한 1930년대 이후 "총독부는 상층계급에게 총독부의 동화정책에 협력할 것을 지역적, 전국적 차원에서 점점 더 강력하게 요구"했으며, 1940년대에는 대다수의 지식인 엘리트층이 동화정책을 지지하는 데 동원되었다(pp. 23-24)고 하며, 이 역시 전게 우찌다 논문을 전거로 들고 있는데,[16] 해당부분의 기술은 일본인・조선인 상공업자를 중심으로 한 엘리트집단이 1930년대 전반~중일전쟁 발발 이전, 조선공업화정책의 추진과 함께 총독부와 협력, 보조를 맞추어 가는 과정을 그린 것으로, 전시하 조선인 명망가의 대일협력과는 관계 없는 사항이다.

조선인 특별지원병제도의 성립배경에 관해서는, "지원병제도의 두번째 이점으로서, 군의 간부들은 이 제도가 조선의 가장 우수한 젊은이들에게 일본에 봉사할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보았다"(p. 47)는 기술의 전거로 가토 요코(加藤陽子)의 저작을 내세우고 있으나, 해당부분에 그같은 기술은 일체 보이지 않는다.[17] 이밖에도 내용상 관계 없는 선행연구를 전거로 삼아 스스로의 주장을 전개하는 사례는 다수 발견된다. 예컨대, 윤해동의 저작이 인용되거나(p. 25),[18] 토드 헨리의 논문이 전거로 제시되지만(p. 66),[19] 이 선행연구들 역시 저자의 논지를 뒷받침해 줄 만한 내용은 아니다.

15) Jun Uchida (2005), "Brokers of Empire: Japanese settler colonialism in Korea, 1910-1937", Ph.D.diss., Harvard University, p. 466.

16) Id., p. 427.

17) 加藤陽子(1996),『徴兵制と近代日本: 1968~1945』, 吉川弘文館, p. 246.

18) 윤해동(2007),『식민지 근대의 패러독스』, 휴머니스트.

19) 토드 A. 헨리(2008),「제국을 기념하고, 전쟁을 독려하기: 식민지 말기(1940년) 조선에서의 박람회」,『亞細亞研究』134.

www.kci.go.kr

집필과정의 부주의나 확인의 불철저 등으로 인해 전거표기에서 서지사항이나 인용 페이지를 잘못 기재하는 것은 그다지 드문 경우는 아니다. 다만, 문헌의 제시가 이렇게까지 틀린 곳 투성이라고 한다면, 이미 단순한 실수로는 보기 어렵지 않을까 싶다. 실례를 무릅쓰고 말하자면, 사료적 근거를 갖지 못하는, 저자의 억측과 상상에 의한 기술을 하면서도, 마치 어떤 근거가 있는 듯이, 내용과는 관계 없는 문헌을 거짓으로 배치하여 주석의 수를 늘렸을 뿐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갖지 아니할 수 없다. 이 같은 문제점은,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 전문가라 하더라도 제시된 전거를 하나하나 찾아 보지 않는 이상에는 간파되기 어려울지도 모르겠다. 아무튼, 이상과 같은 문제점은 실증의 학문으로서의 역사학의 근간에 관계되는 부분이며, 자연과학연구의 사례에서라면, 개찬(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연구결과 등을 작성하는 것, falsification)이나 날조(연구자료・기기・과정을 변경하는 조작을 행하여, 데이터, 연구활동에 의해 얻어진 결과 등을 진실되지 않은 것으로 가공하는 행위, fabrication)에 해당하여, 연구 그 자체의 존립이 좌우되는 중대한 문제인 것이다.

머리말에서도 서술한 바와 같이, 여기서 들고 있는 사례는 본서를 철저하게 검증하기 위해 '틀린 곳 찾기'를 한 결과가 아니며, 어디까지나 나 자신이 본서의 기술내용에 의문을 느끼는 부분에 한정하여, 자신이 소장하고 있거나 인터넷상에서 열람할 수 있는 등,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사료와 대조하여 본 결과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당연하지만, 자신의 관심이 비교적 적은 부분, 이해 정도가 낮은 부분의 기술에 대해서는 의심하는 일 없이 지나쳐 버렸을 가능성도 작지 않음을 부기해 둔다. 본서 전편에 걸친 오류를 찾아내고, 그것을 교정하는 것은 나의 임무가 아니라 －만시지탄의 감이 들지만－ 본서의 바탕이 된 저자의 박사학위논문의 심사 교수들, 그리고 (유명 대학의 출판부 등, 미국의 학술출판은 엄격한 심사로 정평이 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바이지만) 본서 출판에 관계한 심사자들이 수행해야 할 임무였을 것이다.

www.kci.go.kr

4. 논지와 논증내용의 문제점

이상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연구방법상의 심각한 문제점 위에서 입론과 논증이 구축되어 있는 이상, 그 서술 내용이나 논지는 사상누각과 같은 것으로 과연 논의의 가치가 있을지 조차 의심스러우나, 본서에 대해 총체적으로 비평한다는 의미에서 몇 가지 감상을 덧붙여 두기로 한다.

우선 본서가 과연 '정치사' 또는 '정책사'로서 성립하는가에 관한 문제이다. 본서는 전시하 조선인의 동원정책과 그 실태에 대해, '정치사' 또는 '정책사'를 구축한다는 것을 하나의 목적으로 설정하고 있다. 오늘날의 연구경향에서 말하면, 정치변동이나 정책결정 및 실행 등에 있어서 다양한 행위주체의 동인과 행동양상, 그 상호관계를 통해 정치과정을 규명하는 수법이 일반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조선 식민지통치연구의 분야에서는, 과거에 '일제'라고 칭해 왔던 지배권력이 결코 단일한 주체가 아니었다는 인식이 확산되어, 추밀원, 원로, 내각, 의회, 정당, 군부, 민간우익, 조선총독부, 그리고 재조일본인과 조선인 협력자 및 저항세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체의 대립과 교섭 속에서 정치과정을 그려내는 수법이 정착되어 가고 있다. 본서에서도 조선총독부를 비롯하여, 조선군, 육군성, 내각 등, 다양한 주체가 등장하며, 각각의 행동이 서술되어 있다.

그러나 상술한 ③, ④에서 본 바와 같이, 사실은 각 행위주체의 인식과 행동은 거의 실증되지 않았으며, 그저 저자의 자의에 의해 주어가 교체되는 것으로 대체되었다. 마치 방대한 사료를 이용하여, 다양한 행위주체에 의해 전개된 정치과정을 파고든 듯한 인상을 주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착시현상에 지나지 않으며, 행위주체간의 이견과 대립 등은 거의 그려지지 않았다. 이것은 결국, 저자 자신이 극복하고자 한 낡은 역사관, 즉 단일한 지배자로서의 '일제' 사관에 회귀해 버리는 것에 다름 아니다.

예를 들어 황민화정책・전시동원정책의 중요한 행위주체의 한사람이었던 조선총독 미나미 지로(南次郎)는 본서에서 어떻게 다루어졌는가.

www.kci.go.kr

저자는 조선인의 지원병・징병제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나미의 의지와 역할에 주목하고 있다.

본서에서는 다음의 사료를 참고하지 않고 있지만, 조선인 징병제도 실시가 내각에서 결정되었을 때 미나미는, "소생이 가장 힘을 쏟은 반도인 병역의 건도 예년 극비리에 당사자와 협의하여 이번에 성립하게 된 바, 반도의 완성, 소생의 부임 당시의 결의를 달성하여 봉공할 수 있게 된 것이라 생각할 따름입니다"[20]라고 하여, 큰 관심을 가지고 본국 정부와 함께 징병제 시행을 추진해 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저자도 몇 번이고 전거로서 들고 있는 「조선총독부 관계자 녹음기록」을 보면, 조선인징병제도의 시행은 "일본 중앙정부의 요청에 의해 한 것인가, 아니면 총독부가 자발적으로 한 것인가" 하는 질문에 대해, 징병제 실시 당시의 조선총독부 정무총감 다나카 다케오(田中武雄)가 "그것은 중앙정부입니다" 하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도 고려해야만 할 것이다.[21] 징병제 실현에 대한 미나미의 강한 의지와는 별개로, 실제로 정책을 추진한 주체는 누구인가, 그리고 조선총독부 내부에서 징병제 문제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없었던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고찰할 필요가 있다.

아무튼, 저자의 논증내용은 주로 전후(戰後)에 간행된 미타라이 다쯔오의 미나미 지로 전기의 기술을 기본으로 하여,[22] 미나미의 역할에 대해 여러 가지를 논하고 있으나, 그 대부분이 앞서 예시한 ③④의 패턴으로, 사료에 근거한 논증이라고는 하기 어렵다. 예를 들면, "미나미는 조선인의 징병은 내선일체화를 강화하여, 조선인이 천황의 충신이라는 것을 실증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 같은 움직임 [조선인측의 병역요구운동:

20) 日本國立國會圖書館 憲政資料室 所藏 關屋貞三郎關係文書 393-8, [1942년] 4월 25일자 서한.

21) 宮田節子 編・解說(2003), 「未公開資料 朝鮮總督府關係者錄音記錄(1)」, 『東洋文化研究』 2, 學習院大學東洋文化研究所, p. 128.

22) 御手洗辰雄(1957), 『南次郎傳』, 南次郎傳記刊行會.

www.kci.go.kr

인용자 주]을 지지하고, 조선인은 병역의 권리를 요구하고 있다고 하여 중앙정부에 교섭하게 된 것이다"라고 논하고 있으나(p. 45), 그 논거로서 들고 있는『每日申報』1942년 5월 12일자의 기사는, 징병제 실시 결정에 즈음하여 미나미가 경성의 유력자를 소집하여 연술한 것을 전하고 있을 따름으로, 미나미가 '중앙정부에 징병제 실시를 교섭'한 사실이 엿보이는 기술은 어디에도 없다. 또한, 미나미총독이 장래의 조선인 징병제도를 위해 교육제도개정을 추진하여, '보통학교'를 '국민학교'로 바꾸는 개혁안을 "미리 조선군에 보내 사전 승인을 구하고, 이 같은 수정은 군에 관련된 중요사항임을 지적했다"(p. 57)고 하는 기술의 근거로 삼는 사료는, 미나미 총독이 아닌 고이소 조선군사령관의「조선인 지원병제도에 관한 의견」으로서, 전기 ①의 항목에서 본 바와 같이, 미나미의 지원병제도안을 '대중영합주의'로 비판하며, 오히려 조선인 교육의 충실을 기하는 것이 선결과제라고 주장한 문서이다. 학교의 명칭 변경 및 교육제도 개혁안이 육군(조선군)의 승인을 받았다는 기술도 완전히 사실무근이지만, 무엇보다도 1938년에 추진된 조선총독의 교육제도개혁안 제출・승인의 사실이, 어떻게 1937년 중일전쟁 발발 직전에 작성된 조선군사령관의 문서에 의해 뒷받침될 수 있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

두 번째는 본서 안에서 논지가 상호 모순하는 부분이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일본은 조선과 일본의 문화적 유대를 배경으로 […]인종적 융합을 표방했[…]지만, 1930년대에 들어서면서 조선인의 […] 문화적인 약점을 강조하게 되었다"(p. 20)라고 서술한 반면, 지원병제도 실시 후 "정부간행물은 범아시아주의와, 일본인과 조선인이 몇 세기에 걸쳐 동조동근이었다는 것을 강조하기 시작했다"(p. 54)고 하여 어느 쪽을 주장하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없는 기술을 하고 있다.

또한 군대 내부에서 민족간의 승진 차별이 있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 "한국의 역사연구자들은, 일본군은 승진에서도 조선인 병사를 차별했다고 비난한다 […] 종전 시점에서 조선인 병사는 극소수를 제외하면

www.kci.go.kr

전부가 병졸로서, 장교의 숫자는 일본인 병사가 장교로 승진하는 비율에 비해 극히 적었다"고 하면서도, 그 이유는 조선인 병사가 군복무 경력이 일천했기 때문이라고 하여, 의도적인 차별은 없었다고 서술하고 있다(p. 130. 이 분석의 사료적 근거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불과 두 페이지 뒤에서는 평양사단학병사건(1944년)을 다루며, 조선인 학병이 불만을 가지게 된 이유는 "승진 시기에 조선인 학도병이 차별당했기 때문이었다. 장교훈련과정에 응모한 조선인 중에서 승인받은 것은 불과 11퍼센트 […] 일본인에 대한 승인 비율은 86퍼센트였다"(p. 132)고 하여, 승진차별이 실재했음을 사료에 근거해 논증하고 있는 것이다.

세 번째로 본서에는 많은 수의 사실관계 오인이 있음을 지적해 두고 싶다. 그중에서도 심각한 것은, 이 같은 오인이 논지 전체에 관한 토대를 이루어, 가공의 역사상을 형성해 간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것이 징병과 교육에 관한 문제이다. 저자는 이를 중요한 논점으로 착목하여 분석의 주요한 축으로 삼고 있는데, 이 문제의식에 대해서는 완전히 동감하는 바이다. 그러나 저자는 「병역법」이 6년간의 초등교육을 이수한 자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사실무근의 착각을 하고 있는 듯,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당시의 병역법에서는 군 복무를 하기 위한 자격으로서 6년간의 초등 교육을 필할 것을 명시하고 있었다. 조선의 학교 교육과정과 체계가 일본과 달랐기 때문에 조선인들은 군인이 될 수 없었다"(p. 28). 아마도 조선인 특별지원병의 응모자격에 6년간의 초등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했던 것에 기인하여, 징병문제를 다루면서도 「병역법」 자체의 조문 확인을 태만히 했기에 빚어진 착각으로 보인다. 착각은 다시금 새로운 착각을 낳아, 조선인에게 병역 의무가 부과되지 않았던 이유는 일본인 소학교에서는 군사교련을 실시하는 것에 대해, 조선인 학교에서는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p. 56, p. 70, p. 73)이라는, 억측에 근거한 분석으로 발전해 간다. 저자는 한층 더 상상의 나래를 펼쳐, 징병제도실시의 단계에서도 조선에 의무교육이 실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만에 달하는 징병

www.kci.go.kr

적령기의 청년들은 정식 교육을 받지 않았거나, 교육수준이 미달되었기에 징병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p. 104)는 경악할 만한 결론에 이른다.

사실관계만을 간단히 정리해 두면, 전전 일본의 군사교련은 중등 이상의 학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초등교육기관에서는 실시되지 않았다. 조선인의 중등학교 이상에서도 1928년 이후는 군사교련이 실시되었다. 「병역법」에는 애초 학력제한 규정은 없으며, 조선인에게 병역의무가 부과되지 않았던 것은 병역법상의 병역 의무에 관한 규정이 '호적법'의 적용을 받는 자, 즉 일본 '내지인'에 국한되었기 때문이었다. 조선인 육군특별지원병 시행시에 학력조건을 내건 것은, 군무에 복무할 정도의 '국어(일본어)' 능력을 판단하기 위한 하나의 기준이었을 따름으로, 결코 학교교련 경험의 유무에 따른 것이 아니었다.

또 조선에 징병제도가 실시된 법령개정에 대해, 「병역법」 제23조의 개정이라 해야 할 곳에서, "호적법 개정"(p. 107)이라 하는 등, 병역법제 전반에 관한 저자의 무지는 여러 곳에서 드러나, 대단히 중요한 사실관계에 대해 오류 투성이의 설명을 하고 있다. 저자는 병역법 상의 중학교 재학자 이상에 대한 징집 연기 규정이 징병제도 시행 전의 조선인에게도 적용된다고 오해한 듯, "1942년에는 […] 징집 유예의 대상이 된 조선인 학생은 6,771명에 달했다"(p. 51)이라고 서술하고 있으며, 1943년 문과계 학생의 병역연기조치 폐지 후, "조선인 학생의 경우에는, 일본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병역면제제도는 그대로 유지되었다. 나아가 조선인 학생은 1943년부터 조선에 시행된 징병제도에서도 면제되어 있었던 것이다"(p. 81)이라 하여 전혀 사실에서 동떨어진 설명을 하고 있다.

그밖에도 전전 일본의 법령에 관한 무지를 노정한 사례가 적지 않다. 예를 들어, "조선총독부는 조선인 특별지원병제도를 확립한 「칙령 제95호」의 시행을 발표했다"(p. 50), "지원병제도에 관한 국회의 토의는 1937년 6월부터 38년 2월까지 이어졌다"(동상), 또는 "국회는 두 개의 지원병제도를 승인했다. 해군지원병제도는 조선에서 시행된 두 번째의 지원병

www.kci.go.kr

제도였다"(p. 50)라고 하는 등의 기술이 있는데, 이는 '칙령'이라는 법령 형식에 대한 무지의 소산으로, 칙령의 심의・제정이 제국의회의 권한 밖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기 빚어진 오류라 생각된다. '정치사', '정책사'의 재구축을 시도한다는 연구자로서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법제 및 정치제도에 관한 기본적 이해를 결여하고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네 번째는 사료에 의하지 않는, 상상의 산물을 역사적 사실인양 기술한 부분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사료 관련 사항의 ③, ④에서 살펴본 사례들도, 제시하고 있는 전거가 본문과 관계 없는 것, 즉 사료로써 뒷받침되지 않는 서술이라는 점에서는 상상의 기술이라고 해도 좋겠지만, 여기서는 그같은 전거 제시조차도 없이 잘못된 사실관계가 논술된 예를 몇 가지 들어 보겠다.

"대부분의 신문과 전단은 도시부에 배포되었고, 게다가 일본어로 쓰여졌기 때문에 많은 조선인은 읽을 수 없었다. 조선어의 광범위한 사용은 그 목적이 어쨌건 동화정책에 반하는 작용을 한 것이었다"(p. 60)는 기술이 있으나, "국어상용"을 장려하면서도, 조선민중에 대한 선전・동원의 필요로부터 공식적인 장에서 조선어를 말살하지 못하고, 나아가 그 악명 높은 「황국신민의 서사」를 조선인에게 읽히기 위해 한글로 발음을 달아 배부했다는 것 등은, 이 시기를 연구하는 이들에게는 상식의 영역에 속한다. 또 (주 66)에서는 "식민지 당국은 조선인에게 일본어를 습득시키기 위해, 조선어 신문사를 폐쇄하였다"(p. 205)는 기술도 하고 있는데, 『조선일보』, 『동아일보』의 폐간 이유는 표면적으로는 전시하의 물자절약을 위한 신문통폐합이었고, 실제의 의도는 조선인사회의 사상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었음은 말할 필요도 없다. 저자가 주장하고 있듯이 조선어 신문의 폐간 이유가 조선어 말살에 있었다면, 조선총독부 기관지 『매일신보』는 왜 종전에 이르기까지 존속시켰단 말인가.

또 중일전쟁기의 귀환군인의 연설회 개최에 대해 "중요한 것은, 총독부는 이 같은 강연회를 통해, 태반의 조선인이 거주하는 조선의 농촌지

www.kci.go.kr

대의 실정에 접할 기회를 얻었다는 것이다"(p. 64)는 기술도 있는데, 이것도 상상의 산물이다. 조선총독부는 이미 고등경찰에 의한 일상적 정보수집의 한편으로, 중일전쟁 발발 직후부터 전국의 촌락에서 '시국좌담회'를 개최하여 '민정(民情) 조사'를 행하고 있었던 것이다.

다음의 문장은 상상에 의한 기술 중에서도 단연 압권이라 할 것이다. "일본어 능력이 뛰어난 많은 조선인 병사들은, 자신들이 조선인이라는 것을 감추었기에 일본인 병사와 평등한 취급을 받았다.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일본식의 이름을 쓰고, 일본인 병사가 대다수인 부대에 있으면서 유창한 일본어를 말하고, 조선인이라는 것을 공공연히 발설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일본어 능력이 뛰어난 조선인 병사는 일본인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조선인 병사는 같은 부대에 다른 조선인이 몇 명 있는지 모를 정도였다"(p. 128)라고 서술하고 있다. 내지인과 외지인을 법적으로 구별하는 호적법제의 존재, 일본군의 내무생활의 실태, 그리고 같은 출신지의 입영자를 같은 연대에 배속하는 일본 육군 특유의 '향토연대' 제도 등을 고려하면, 실제로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이다. 이 시대를 이해하기 위한 기본적인 역사 지식의 결여에 기인하는 상상의 산물이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하, 본서 전체에 대한 총평으로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다. 첫 번째는 본서를 관통하는 문제의식이기도 한, 한국민족주의(그와 동조하는 일본의 '좌익'을 포함함)에 대한 비판이다. "민족사관적 패러다임은, 한국사회에 있어 강력한 기득권을 갖고 있으며, 그같은 시각에 따른 한국의 역사야말로, 공립학교에서 교육되고, 박물관에 진열되며, TV에서 방영되는 국가화된 역사적 인식인 것이다"(p. 7)라는 표현이 저자의 생각을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보인다. 확실히 한국사회의 민족주의 과잉현상은 문제이며, 극복되어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같은 문제제기를 한 것은 저자가 최초도 아니며, 이미 1990년대의 '식민지 근대화론'이 촉발한 '근대화', '근대성'에 관한 성찰, 식민지 '공공성'의 논의 및

www.kci.go.kr

'국사의 해체' 등, 20년 가까운 세월 동안, 학계에서 모색・논의되어 온 내용으로서, 많은 성과를 내고 있는 바이다. 실은 저자 자신이 이 같은 시점에 의한 선행연구를 다수 이용하여 자신의 논리를 구성하면서도, 종국에는 한국의 역사학계는 의연히 강고한 민족주의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다는 듯이 논술하고 있다. 그리고 그 민족주의 역사학의 예시로서 거명되는 것이, 1965년에 간행된 동원모(Wonmo Dong)의 저작이나, 1961년의 아메리칸대학 박사학위논문을 바탕으로 한 유정렬(Joung Yole Rew)의 저작이다. 연구방법론・실증수준 모두 오늘날의 그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50여 년 전의 연구성과, 그것도 미국에서 이루어진 연구가 금일의 '한국의 역사학계'를 대표하는 저작으로서 비판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저자의 비판대상이 매스미디어 등의 사회적 담론에 대한 것이라면 그나마 의미를 인정할 수 있겠으나, 본서가 과연 실증연구로서의 선행연구의 한계를 극복한 지점은 어디에 있는지 심히 의문이 남는다.

두 번째는 서구 제국의 식민지 통치가 현지인에 대한 폭력적・탈법적 동원을 통해, 현지인 부대를 구성, 대외전쟁에 적극적으로 활용했다는 것과, 일본의 조선・대만 통치와의 차이에 주목할 것을 요구하면서도, 그 차이가 어디에 기인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급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식민지통치의 기조를 비롯하여, 국민군으로서의 일본군의 창설과 편성, 통수권과 식민지장관의 권한문제, 내지연장주의와 자치식민지 등, 고려해야 할 측면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같이 서구 식민지통치에 대한 일본제국의 식민지통치가 가지는 특징에 대한 고찰이 결여된 논의는, 필연적으로 식민 본국의 '선의'의 유무로 귀결되며, 그 결과 일본 식민지통치의 '선량함'만이 부각되고 마는 것이다.

www.kci.go.kr

5. 본서를 둘러싼 동향과 비평에 관하여

일본에서 본서에 대한 반응은 확연히 갈라진다. 일본근대사 및 한국근대사의 전문연구자 사회에서는 철저한 무시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반면, 사회 일각에서는 본서의 연구내용에 상찬을 보내고 있다. 전자는 전술한 바와 같이 본서가 가지는 치명적인 약점과 결격사유로 인해 학술연구로서 인정하지 않는 까닭이며, 후자는 근년의 일본사회 일각에서 세력을 넓혀가는 '역사수정주의', 그와 결합하곤 하는 '혐한'의 논리와 맥을 같이 하기 때문일 것이다.

사실 주저작인 본서가 일본에 번역되기 전, 이미 저자는 『'일본의 조선통치'를 검증한다: 1910-1945』라는 공저를 통해 일본에 이름을 알린 바 있다[23]. 이 책은 2015년 영어 원저[24]가 출판되기도 전인 2013년에 일본어 번역본이 먼저 간행된 희귀한 경우인데, 미국의 일본근대정치사연구자 죠지 아키타가, 자신에게 결여된 한국근대사 관련의 지식을 브랜든 팔머의 연구내용을 대폭 참조하는 방식으로 집필하였기에 공저의 형태로 세상에 내어 놓게 된, 스스로가 '역사수정주의'의 입장에 서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는 저작이다. 이 두 권의 책이 같은 번역자의 손을 거쳐 같은 출판사에서 간행되었다는 점도 지적해 두고 싶다. 이는 근년의 출판 및 독서 시장 내에서의 수요, 보다 명확히 말하면 '실제의 역사'보다 '그랬으면 하고 바라는 역사'에 대한 희구가 적절한 대상을 찾은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한국어 서평에서는 상세한 내용을 생략하지만, 사실 본서의 일본어 번역은 처참할 정도의 수준이다. 원저에서 한국어 서지가 맥큔-라이샤워

23) ジョージ・アキタ, ブランドン・パーマー, 塩谷紘 譯(2013), 『「日本の朝鮮統治」を検証する: 1910-1945』, 草思社.

24) George Akita & Brandon Palmer(2015), *The Japanese Colonial Legacy in Korea 1910-1945 : A New Perspective*, MerwinAsia.

www.kci.go.kr

표기법에 의해 로마자 표기되어 있던 것에 멋대로 수정을 가함으로써 역자와 출판사 스스로가 본서의 학술적 가치를 크게 떨어뜨린 것을 비롯하여, 한국어 및 한국사에 무지하다고 스스로 밝히고 있을 뿐 아니라, 사실은 한국사만이 아니라 일본사에 대해서도 이해가 부족한 저널리스트 출신인 역자가 자신의 역량을 뛰어넘는 무모한 번역을 시도함으로써, 원래부터 문제가 많았던 원저가 일본어 번역을 통해 더욱 많은 문제를 안게 되는, 말하자면 '2차 재해'를 일으키고 있다.[25] 지금까지 저널리스트나 평론가들이 써 왔던 에세이 수준의 책들과는 달리, 현직 역사학 교수가 일견 '방대한 문헌'의 섭렵을 통해 '역사수정주의'적 논지를 구성한 연구서, 그것도 한국과 일본 양쪽에서 자유로운 미국인 연구자의 '객관적' 시점이라는 점이, 전술한 '시장'의 요구와 맞아 떨어진 결과가 아니었을까.

본서는 또한 저널리스트 출신의 우파 논객인 사쿠라이 요시코(櫻井よしこ)가 주재하는 재단법인 국가기본문제연구소로부터 2014년 제1회 데라마 마리 기념 일본연구장려상(寺田眞理記念日本研究奬勵賞)을 수상하고 있는데, 심사위원회 측은 "일본의 식민지 정책은 악랄한 비인도적 성격을 갖고 있었다는 일차방정식"을 극복하고, 전시하의 조선인 동원의 다양성을 밝힘으로써 "제삼자적 객관성과 학문적 정확성을 갖춘 뛰어난 연구"라고 심사의견을 밝히고 있는 데에서도 이 같은 시각을 확인할 수 있다.[26]

일본 사회 내에서 이 같은 일부의 여망에 부응하며 각광을 받기에 이르렀지만, 사실 본서는 한국 측의 직・간접적인 지원 속에서 세상에 나오게 된 것이라는 점도 덧붙여 두고 싶다. 본서에서 활용된 구술자료는 저자가 '식민사관적 논조'의 한국사를 재생산하는 기관으로 비판했던 독

25) 한국어로 쓰여진 이 서평을 읽을 독자들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고 생각되어, 일본어 서평에서는 구체적으로 지적한 바 있는 번역상의 문제점에 관해서는 생략하기로 한다. 상세한 내용은 일본어 서평을 참조.

26) 국가기본문제연구소 홈페이지. https://jinf.jp/japanaward/japanaward_1st.

www.kci.go.kr

립기념관의 자료수집사업의 산물이며, 본서 자체가 “한국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한국 정부 산하에 설립된 한국국제교류재단(Korea Foundation), 그리고 한국정부 및 한국계 미국인으로부터의 기부가 일부를 이루어 성립한 워싱턴대학 한국학프로그램의 출판비 지원에 의해 간행되었다는 점은 아이러니한 일이라 하겠다.

한편, 본서에 관한 전문연구자의 서평도 한국과 미국의 학술잡지에 발표된 바 있다.[27] 타인의 서평까지를 비평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어쩌면 서평이 담을 수 있는 범위를 뛰어넘는 것일지도 모르겠다는 우려를 하면서도, 전문가에 의한 서평은 아마추어 독자의 독서감상문과는 다르며, 해당 연구성과에 대한 일정의 판단기준을 제시함과 함께, 학계 전반의 이해수준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기에, 서평은 연구자 사회 내에서의 책임을 수반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해당 서평이 전문연구자로서 해야 할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했거나, 또는 잘못된 평가 기준을 제시한 경우에는, 전문가의 의견으로서 세상에 발표된 서평 그 자체가 비평과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또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이다.

유감스럽게도 이 세 편의 서평 중 어느 것도 본서의 사료이용 상의 문제나 사실관계의 오류에 관해 언급하지 않은 채, 문제의식과 결론에만 비평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사료에 근거한 사실관계의 검증 및 분석이라는, 역사연구로서의 대전제라고도 할 수 있는 기초부분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에도, 그 위에 지어진 사상누각과 같은 분석과 논리전개, 결론만을 비평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얼마나 허망한 일이겠는가. 본서에서 노정된 갖가지 오류와 개찬・날조의 혐의를 간파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전문연구자로서의 기량에 관련되는 문제이며, 그같은 문제점을 알면서도 보아 넘겼다고 한다면 비평자로서의 임무를 방기한 것에 다름 아니다.

27) 김청강(2014),「서평」,『歷史學報』221, pp. 519-525; Mark Caprio (2014), “Book Review”, *Sungkyun Journal of East Asian Studies 14-1*, pp. 143-144; Michael E. Robinson (2015), “Review”, *Journal of Japanese Studies 41-1*, pp. 147-150.

www.kci.go.kr

결과적으로는 의도치 않은 공범관계가 되지 않을 수 없다.

서평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카터 에커트(Carter Eckert)는 본서의 뒷표지에 "정부의 공식문서, 개인사, 선행연구를 포함한 한국과 일본의 방대한 자료를 통합하여 일본의 조선인에 대한 전시 동원에 대한 뛰어난 연구를 이끌어 내었으며, 구태의연한 학문적 관점에 대한 도전을 행하고 있다"고 추천사를 쓰고 있으며, 세 편의 서평 모두 본서를 타카시 후지타니(Takashi Fujitani)의 저작『제국을 위한 인종(Race for Empire)』과 더불어 전시체제하의 식민지 조선 연구의 중요한 저작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 과연 이 같은 평가가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제껏 살펴본 바와 같이 매우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기왕에 발표된 서평 중에서는 김청강이 저자 스스로가 제기한 문제설정에 대해 구체적인 분석의 납득할만한 논리구조가 결여되어 있음을 비판하여, 그나마 비평으로서 의미 있는 역할을 수행했다고 생각된다. 그에 비해 "균형을 지키며, 치밀하게 구성된 연구"로서 "금후의 식민지 말기에 관한 연구가 진전하기 위한 발판으로서의 역할"(마이클 로빈슨), "조선인 남성의 군사동원 및 노무동원을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저작"(마크 카프리오)이라고 하는 등의 상찬은, 과연 비평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것이라 할 수 있을까.

www.kci.go.kr

www.kci.go.kr